

문 21. 「저작권법」상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

- ㄱ.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ㄴ.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.
 ㄷ. 2차적저작물작성자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- ① ㄱ(×), ㄴ(○), ㄷ(○)
 ② ㄱ(○), ㄴ(○), ㄷ(×)
 ③ ㄱ(○), ㄴ(×), ㄷ(○)
 ④ ㄱ(×), ㄴ(×), ㄷ(○)
 ⑤ ㄱ(○), ㄴ(○), ㄷ(○)

문 22. 「저작권법」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?

- ①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
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·훈령
 ③ 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의결·결정
 ④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중 동일한 저작자의 진술을 편집한 것
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
문 23. 甲의 창작곡을 乙이 공연하는 장면을 A가 무단으로 촬영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경우, A가 침해하지 않은 「저작권법」상의 권리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의 복제권 ② 甲의 배포권 ③ 甲의 공중송신권
 ④ 乙의 복제권 ⑤ 乙의 전송권

문 24. 다음 설명 중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「민법」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()된다

- ① 신탁 ② 소멸 ③ 양도
 ④ 경매 ⑤ 기탁

문 25. 「저작권법」상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음반에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발생한다.
 ②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.
 ③ 음반제작자는 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.
 ④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침해죄로 처벌된다.
 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조 세 법

문 1. 「국세기본법」상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 ② 납세자가 화재로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 기한연장을 해주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 ③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천재(天災)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다.
 ⑤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(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제외).

문 2. 「국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증여세 ② 증권거래세 ③ 상속세
 ④ 부가가치세 ⑤ 인지세

문 3. 「국세기본법」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.
 ③ 연대납세의무자 甲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乙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.
 ④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.
 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.

문 4. 「국세기본법」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국제거래는 고려하지 아니함)

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,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()년간이다.

- ① 5 ② 7
 ③ 10 ④ 15
 ⑤ 20

문 5. 「국세기본법」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기는 ‘국세의 체납처분일’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.
- ③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- ④ 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과점주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‘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’에서 제외된다.
- ⑤ 과점주주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로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주주에게 있다.

문 6. 「국세기본법」상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.
- ②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.
- ③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
- ④ 종합소득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최초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이 있다.
- ⑤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.

문 7. 「국세기본법」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판결로 그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, 납세의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- ③ 과세표준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.
-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거부처분이므로 국세불복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.

문 8. 「국세기본법」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가산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)

ㄱ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(A)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.

ㄴ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(B)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.

A B

① 1 - 10

③ 1 - 20

⑤ 6 - 50

A B

② 6 - 10

④ 1 - 50

문 9. 「국세기본법」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때에만 가능하다.
- ② 행정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.
- ③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.
- ④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로 한다.
- 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문 10. 국세불복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ㄱ.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ㄴ. 심판청구대상이 법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 조세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ㄷ.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.

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

② ㄱ(○), ㄴ(×), ㄷ(○)

③ ㄱ(○), ㄴ(○), ㄷ(×)

④ ㄱ(×), ㄴ(○), ㄷ(○)

⑤ ㄱ(×), ㄴ(○), ㄷ(×)

문 11. 「국세기본법」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대상이 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.
-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.
- ⑤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.

문 12. 「국세기본법」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-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문 13. 「국세기본법」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.
- ② 5억 원 미만 국세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③ 납세고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그 고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한번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.
-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뿐만 아니라 가산금·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한다.
- ⑤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유지된다.

문 14. 「소득세법」상 위법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「국세기본법」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.
- ㄴ.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.
- ㄷ.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임원에게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.
- ㄹ. 「이자제한법」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, 현실로 지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.

- 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×)
- ②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×)
- ③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○)
- ④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- ⑤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

문 15. 「소득세법」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회사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
- ②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
- ③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④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 된다.
- 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된다.

문 16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.
- ㄴ.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,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ㄷ.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- ㄹ. 예정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ㄹ
- ④ ㄴ, ㄷ
- ⑤ ㄷ, ㄹ

문 17. 세무공무원이 거주자 甲의 광고출연과 관련된 아래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, 甲의 2015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A주식회사는 2015년 중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甲을 모델로 한 신문광고를 1회 제작하였다.
- 甲은 출연료 5,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밖의 다른 소득은 없다.
- 甲은 전업주부로 다른 직업은 없다.
- 광고출연과 관련하여 甲이 실제 지출한 경비는 없다.

- ①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,000만 원이나,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 또한 5,000만 원이다.
- ②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,000만 원이나,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 또한 5,000만 원이다.
- ③ 甲의 광고출연료는 부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.
-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,000만 원이나,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,000만 원이다.
- ⑤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,000만 원이나,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,000만 원이다.

문 18. 「소득세법」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

- ㄱ.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영업소는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.
- ㄴ.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- ㄷ.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- ㄹ.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- 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×)
 ②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
 ③ ㄱ(×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
 ④ 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×)
 ⑤ ㄱ(×), ㄴ(×), ㄷ(○), ㄹ(○)

문 19. 「소득세법」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.
- ②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, 집합투자의 대상이 주로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한다.
-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한다.
-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한다.
- ⑤ 이자소득의 경우 관련되는 지급이자자가 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.

문 20. 「부가가치세법」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甲이 국내에서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甲은 그 대가를 A에게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- ② A가 법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乙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.
- ③ A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구동되는 게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.
- ④ A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'간편사업자등록'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⑤ 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인 丙을 통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A가 그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

문 21. 「부가가치세법」상 납세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 법인의 지점은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.
-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
- ③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.
- ④ A, B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A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, A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
- 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박람회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.

문 22.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A국가 소재 외국법인 사업자 B에게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-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④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.
- ⑤ 국선번호인이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제공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.

문 23. 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B에게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3대를 8억 원(법령상 시가는 10억 원임)에 판매하였고(이하 '이 사건 판매'), 이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출자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.
- ㄴ. 이 사건 판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인 8억 원과 그 시가인 10억 원과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지만 이 사건 판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.
- ㄷ. 이 사건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B사의 위 컴퓨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그 시가인 10억 원이 된다.
- ㄹ.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ㄱ, ㄹ
 ④ ㄴ, ㄷ ⑤ ㄴ, ㄹ

문 24. 「법인세법」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그 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
- ② 국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- ③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- ④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
- ⑤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

문 25. 「법인세법」상 법인세의 결정·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.
- ㄴ.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,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- ㄷ.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·경정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다.
- ㄹ.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다.

- ① ㄱ(○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
- ② ㄱ(○), ㄴ(○), ㄷ(×), ㄹ(×)
- ③ ㄱ(×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
- ④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- ⑤ ㄱ(×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
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